

홈 > 뉴스 > 정치 > 인천

"청라 첨단산업단지 절실"

2006년 11월 01일 (수)

박춘대·정진오 ✉ schild@kyeongin.com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문제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부각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송영길 의원은 1일 있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라구역 내 IHP(Incheon Hi-Tech Park)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업용지 전환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청라지구는 GM대우의 R&D센터와 KD센터, 북항 자동차 전용부두 등을 연계하는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이라면서 “재경부가 당초 정한 레저, 국제금융, 주거지역 위주의 개발보다는 첨단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청라지구 남쪽 화훼단지 28만3천여평을 산업용지로 바꿔주면 이 곳에 외국인 투자 첨단 기업을 집중 배치하겠다면서 IHP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시가 IHP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하면서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제안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산업용지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 중의 하나인 한국토지공사도 청라지구의 주요 개발 방향인 외국 금융자본 유치를 통한 국제금융도시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토공 사장은 “청라지구의 국제금융도시 구상이 3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명품도시로 변질되고 있다”고 개발방향이 변질되고 있음을 실토했다.

특히 토공은 청라구역에 유치하려던 유니버설스튜디오 건설사업을 포기하고, 그 부지 28만평을 해외 첨단 바이오 기업, IT기업, 항공 R&D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날 국감에서 밝혔다.

유필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양해각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지적한뒤 “해외첨단기업유치로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없는 538만평의 청라지구의 60여만평의 부지가 산업용지로 전환될 경우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가 없어 애를 태우는 인천의 외자유치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산업용지로 용도전환 하겠다"

청라 지구 내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

한국토지공사가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레저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해온 세계적인 영화제작사 유니버셜스튜디오의 테마파크 유치가 무산 위기<10월11일자 7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이 테마파크 부지 28만평이 산업용지로 용도 전환해 의료바이오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3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장에서 “그동안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청라지구내 테마파크 조성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의향을 보여 작년 5월 협조 서한을 체결했으나, 유효 기간이 지난데다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사업 진척이 없어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이 곳을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국가 성장동력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체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 28만평을 외국의 우수한 첨단바이오기업, IT기업, 항공R&D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첨단 산업용지로 용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니버셜스튜디오측은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 영상물 체험관과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국내 최대 28만평 규모 테마파크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토지공사와 협조서한을 체결했으나, 이 곳이 금융비즈니스 중심이 아니라 테마파크, 골프장 등 레저·스포츠 위주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재정경제부도 청라지구에 대규모 테마파크 대신 첨단 의료바이오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국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첨단 산업용지로의 용도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테마파크 대신 첨단 바이오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토지공사와 함께 미국의 우수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유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희기자 jhk@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6-10-31 17:32:24

영종지구 내 산업용지 '부족'

고작 9% 불과...자족도시 기능 수행 못해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할 영종지구 576만평 대부분이 주택 및 상업용지에 편중돼 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9%에 불과한 산업시설용지를 2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각각 70%, 30%의 지분으로 영종지구 576만평을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공항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항공 물류 산업도시 건설, 수변공간의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레이션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토공은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3만2천명을 수용하기 위해 모두 7조2천176억원(용지보상비로 3조6천870억원, 조성비 2조554억원, 기타 1조4천752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공은 영종지구 개발을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에 걸맞는 외국의 첨단업종 유치를 도외시해 송도나 청라지구처럼 또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공이 추진하는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용지 145만평(25.3%), 상업·업무시설용지 24만평(4.2%), 공공시설용지 310만평(53.7%), 유보용지 42만평(7.4%) 등으로 짜여져 있어 정작 경제자유구역에 부합되는 산업용지는 54만평(9.4%)에 불과하다.

산업용지에 외국기업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대로 영종이 개발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공항신도시처럼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지는 또 하나의 신도시 건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사업목적에 걸맞고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를 최소한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토공이 개발하려는 영종지구 576만평 중 주택, 상업용지를 합하면 30%에 달하고 산업용지는 고작 9%에 불과하다”며 “영종지구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는 영종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지구는 국제물류, 관광 기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주

변에는 이미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물류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국제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중이어서 산업단지 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족기능을 갖추기가 요원해 단순 신도시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박준철terryus@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6-10-31 20:53:30